

“찾고 싶은 전통시장 만들겠다”

이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논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광주상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상인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온라인 상거래 등 유통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둘러보고 상인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상인연합회는 지난 2006년 7월 31일 발족했으며, 현재 29개 회원시장이 참여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손중호 광주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상인연합회 임원들이 참여해 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견과 발전 방안 등에 논의했다.

손중호 광주상인연합회장은 “소비자의 구매패턴 등 다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상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인상인교육관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상인대표들은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키즈카페 설치 ▲상인연합회 간담회 정례회 등을 제안했다.

이용섭 시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활동의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 하는 삶의 현장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찾아오고 싶고, 즐기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308개 시장, 1,566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35개 시장, 514억원) ▲특성화사업(22개 시장, 230억원) 등 전통시장 노후 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철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29일 오전 서구 양동시장 내 광주상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손중호 상인연합회 회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시 제공

AI 기반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 조성

시, 상상놀이터 건립 추진 교육·공연 등 복합문화시설 발달특성 고려 운영방안 수립

광주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이 조성된다.

광주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린이 상상놀이터(가칭) 건립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29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로서 ‘아이키우기 좋은맘(MOM)

편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부족한 어린이 전용 놀이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어린이 상상놀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오감을 자극하는 어린이 놀이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놀이와 체험, 교육, 공연, 교류 공간과 함께 편의 시설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중호 행정부시장 등 참석자들은 용역수행기관으로부터 과업목표와 방향, 과업수행계획, 추진 일정 등을 듣고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건립 부지, 타당성 및 사업규모, 연령별(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발달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기본 및 실시설계,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3년 착공 후 2025년 개관할 계획이다.

김중호 행정부시장은 “놀이는 모든 어린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라며 “광주의 어린이들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만날 수 있는 복합 공간에서 뛰어놀며 미래세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김용집 “경차 혜택 관련법 개정하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채택

광주시의회가 29일 제안한 ‘경형자동차 혜택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채택됐다.

법안은 모든 경차 구매자에게 취득세 면제, 유류세 연간 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 경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원 지원, 연료개별소비세(유류세) 연간 50만원까지 환급 등이 포함됐다.

합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경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시의회는 감면 일몰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없애 경차 구매자의 세금 감면을 늘리도록 제안했다.

시의회는 또 유류세 환급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차를 구매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한해 1회 한도로 구매 보조금



50만원을 지급하고 연간 50만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용집 의장(사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판매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고민했다”며 “금번 건의안이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전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개선 건의

비율 20→40% 상향 등 요구

전남도는 인력난으로 어려운 농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력 부족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자까지 급감해 인력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반고용허가제도(E-9비자) 운영 시 비수도권 지방 사업체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40%로 상향할 것과 청년인구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일반고용

허가제 가점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계절근로자(E-8비자)는 시군에서 직접 해외 지자체와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촌인력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품목으로만 근로계약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 근로계약 허용작물 범위를 확대할 것을 바랐다.

어선원의 경우 2021년 업종별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어선원 구인난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 수요가 많은 연안복합,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등 6개 업종에도 고용허용 인원을 적당 2명에

서 4명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어선 통수에 따라 고용노동부(20톤 미만·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20톤 이상·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된 외국인 어선원 관리제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은 고령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어가 일손 부족 해결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체류 외국인’의 특례제도’를 포함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지원책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본격 육성

도, 내달 8일까지 추가 선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가 사업아이디어가 있지만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사업’ 2차년도 기업을 선발해 본격적인 육성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화산 백신산업특구 전주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연구개발(R&D), 비임상시험(GLP), 임상시험(GCP), 임상 시료·생산제조 시설(GMP) 등 스타

트업의 연구부터 생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육성 플랫폼이다.

사업은 지난해 시작했으며,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을 26개 기업에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받은 8개 사는 공정 및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논문 발표를 비롯해 투자유치 등 광범위한 성과를 거뒀다.

2차년도인 올해도 면역치료제, 혈액암 진단키트, 방사선 치료 보조제, 코로나19 신속 현장진단 PCR 진단키트, 우울증·자살 진단키트 등을 개발하는 5개 기업을 1차 선발했다. 현재 2차로 오는 10월 8일

까지 추가 모집 중이다.

지원을 원하면 전남도(www.jeonnam.go.kr), 화산군(www.hwasun.go.kr),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www.jbf.kr), 생물약연구센터(www.jbr.re.kr)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선발한 스타트업 기업엔 연구 및 시제품 개발,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임상시험실명 투자유치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곽원재 생물약연구센터장은 “지역 스타트업의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합의

전남도는 행정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해 지난 28일 열린 제23차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추진을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권고안은 22차 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또 2건의 연구과제 중 하나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2차로 나눠 여수산단과 그 주변 마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과제의 실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추진 전문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의 실시계획 수립부터 완료까지 과업의 전반에 대해 검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건강 역학조사는 2022년 하반기로 예정된 환경부의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종합 평

가 결과, 거버넌스의 1차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 후 거버넌스에서 최종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거버넌스에서 분야별 추천을 받기로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여수산단 내 기업의 환경실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굴뚝자동 측정기기(TMS) 설치를 확대하고, 실시간 대기 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구축 등을 통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을 때릴 때
-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장애인에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조사를 합니다.
-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